

이춘석 “호남발전 구체적 비전 보여라”

19대 국회 마지막 의원총회 원내수석부대표 마무리 인사말… “전북은 호남 내에서도 차별”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3선, 익산갑)이 차기 지도부에 호남 민심을 바로 보고 호남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19일 오전 열린 19대 국회 마지막 의원총회에서 이 의원은 원내수석부대표 마무리 인사말을 통해 “호남의 민심을 되돌리는 유일한 길은 낙후된 호남의 발전을 위해 얼마나 진정성 있는 의지와 구체적인 비전을 보여주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발언 전문

제가 수석으로서 마지막 발언을 배려해 주신 여러분과 그간 고생하신 원내행정실 당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유승민 사태 등 새누리당 내부 격변과 저의 부족함으로 협상을 잘 했다는 평가를 내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호 원내대표님과 박원주 수석이 정말 든든합니다. 두 분은 원칙적이지만 유연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잘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러한 평가를 받고 있어 정말 기쁩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협상을 잘하지 못했지만 야당의원답지 않아 좋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

야당의원들은 일단 똑똑하고 논리적이야 한다는 강박이 있습니다. 경험상 협상은 논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실제 협상에서는 오히려 야당의원의 똑똑함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차기 지도부는 보다 더 정교하고 전술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유연해 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호남 유일 3선 의원으로서의 부타입입니다.

앞으로 호남 얘기를 할 기회가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학생운동을 하였던 분들이 많습니다. 20대 국회에는 더 많습니다.

어제가 5. 18이었습니. 여러분 중에는 광주 민주화항쟁으로 인생의 경로가 바뀐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 호남은 인생의 ‘분기점’이지만 호남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어쩌면 날이 갈수록 더 힘든 ‘삶’과 ‘생활’입니다.

호남이 이번 총선에서 왜 더민주를 버렸는지 원인을 진단하는 것을 보면 호남의 원으로서 매우 답답합니다.

공천 실패 때문에? 문재인 대표와 김종인 대표에 대한 반감 때문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더 답답합니다.

한바탕 얘기하면, 가난하니까요. 못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당을 찍으면 정권교체해서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불표를 주면 80%, 90% 불표로 호남당으로 낙인찍히는 게 부당스럽다고 하는 것이 우리 당의 태도였습니다.

그런데도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대선이든 이기려면 그 표가 필요하니까 또 표를 달라고 하고 표를 주면 또 부당스러워 했습니다.

이제 호남은 그런 이중적 태도를 더 이상 보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못사는 것을 어떻게든 해결하는 쪽에 표를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권정당이 되면 호남이 지지할 것이라고 당내 내분만 없으면, 대선 주자만 제대로 세우면 호남이 다시 우리당을 지지하겠지, 그런 생각으로는 호남민심 얻지 못합니다.

이중적 태도보다 차라리 솔직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호남 발전을 위해 우리들이 얼마나 구체적인 비전을 줄 수 있는가, 이것 가지고 국민의당과 경쟁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불편해도 저는 계속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호남 의원 단 3명이고, 저는 거기서 유일한 3선의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 당이 진정성 있는 목소리를 내줄 것을 간절하게 바랍니다.

호남사람들은 계층적으로도 어렵고, 지역차별로도, 당내에서도 소외받는 3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 지역구 전북은 호남 내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부채의식으로 조금 더 배려하면 되는 대상으로 생각하면 호남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의미를 여러분이 꼭 알아주시고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육위, 도교육청 추경 심의 잠정 중단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9일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전라북도교육청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의를 잠정 중단했다.

이날 도의회 교육위의 심의 중단 이유는 학교안전공제회 출연금에 대해서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아서다.

도의회 교육위 관계자는 “학교안전공제회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해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에 의결과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 교육청은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해 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도 교육청 학교안전공제회 출연금은 현재 7억 8,100만 원이며 도의회 교육위는 도 교육청의 공식 사과가 있기 전까지 추경예산안 심의를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신광영 기자

“탄소법 통과 환영” 새누리당·국민의당 도당

새누리당 전북도당과 국민의당 전북도당이 탄소법 통과를 놓고 환영했다.

먼저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이 공조해서 만들어낸 협치의 성과다”고 했다.

19일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논평을 통해 “전라북도 도지사와의 면담에서 탄소법의 민원을 접수받아 김광영 도당위원장이 성과를 도출해냈다”고 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정치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오직 전북도민들과 국민만을 바라보고 정치를 해 나야 할 것이다. 특히 국민의당은 부총리와 3당 정책협의장이 참여하는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에서 제 1과제로 누리과정 예산문제를 다룰 예정이며 국비지원을 관철시킨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은 “전북발전 100년을 책임질 탄소법이 마침내 통과됐다”면서 “4.13 총선에서 당선된 새누리당 국회의원 1석, 정운천 당선자(전주시)의 힘이 있기도 체 시작하기 전, 전북에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했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은 “새누리당 전북도당은 정운천 당선자와 함께 탄소법 제정으로 시작되는 전북의 탄소산업 발전을 위해 집권당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신광영 기자

박원순 “재정 중압과 지방 8대2”

박원순 서울시장의 19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절대적 불균형 상태”란 평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참총회지방정부위원회 주최 ‘20대 국회 무엇을 할 것인가? - 자치 분권의 과제’ 간담회에 참석해 “일은 지방정부가 6대4로 더 많이 하는데 재정은 2대8로 절대적 불균형 상태”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5대5라고 하는데 이는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허물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기초연급이나 누리예산을 보면 지방정부 재정지출을 초과하는데 한번도 상의가 없었다”며 “서울시는 이것 때문에 몇천억원 추가 지출이 일어나는데 갑자기 정부가 결정해 지출하고 있다. 서울시가 이 정도니 하물며 다른 단체는 오죽하겠나. 월급주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성주 기자



도의회 환복위 새만금 공사현장 점검

전북도의회 환복경지위원회는 19일 새만금 노출부지 및 동서 2축도로 등 공사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강영수 위원장과 국주영은 부위원장, 이상현·이현숙·정진세·정호윤·최윤열 위원은 새만금 홍보관에서 최재용 새만금추진지원단장으로부터 주요현안을 보고 받은 뒤 새만금방조제를 중심으로 항공투어를 실시하며 노출부지 및 개발 지구를 직접 확인했다.(사진=전북도의회 제공)

정진석 원내대표 증진연석회의 개최키로

이번 내분사태 주도 양 계파의 초·재선 강경 인사들 피하자는 의도로 풀이돼

정진석 원내대표 증진연석회의 개최키로

이번 내분사태 주도 양 계파의 초·재선 강경 인사들 피하자는 의도로 풀이돼

정진석 원내대표가 19일 당 내분 사태 수습을 위한 증진연석회의를 개최를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은 친박이든 비박이든 이번 내분 사태를 주도하고 있는 양 계파의 초·재선 강경 인사들을 피하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공주 신관동 자택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20일) 증진연석회의를 열어서 의견들을 들어보겠다”며 “그게 순서 아니냐”고 증진연석회의를 통한 사태 해결 방침을 밝혔다.

20일 열린 증진연석회의에서는 내분 사태의 원인이었던 비대위 인선 문제가 핵심 의제로 부각될 전망이다.

친박계는 현재 비대위 전면 재구성을 촉구하고 있고, 비박계는 원안 고수로 맞서고 있어 정 원내대표의 결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치 당선인 총회를 열었다가는 양 계파의 강경파들의 감정싸움만 분출하는 장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당 핵심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탄에 하나 이 문제를 또다시 당선인 총회와

같은 중구난방식 집담회의체에서 결정하겠다고 할 경우 아마 계파의 이해관계 지를 받고 덤벼드는 초 재선들의 놀이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4선 이상이 참석하는 증진연석회의를 통한 차분한 결정을 이끌어 보자는 게 정 원내대표의 의도로 보인다.

아울러 전날 오후부터 공식 일정을 중단하고 ‘공주 집기’에 나섰던 정 원내대표가 양 계파의 수장격 인사들에게 두루 전화를 돌려 사태 해결을 위한 수습책을 논의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친박계 좌장 최경환 의원과 어떡하던 소통을 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 김무성 전 대표와의 의견을 구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비박계 중 최대 계파를 형성하고 있는 김부성계 인사들은 하나같이 사태 봉합에 방점을 찍고 있다.

김 전 대표 최측근인 강석호 의원은 이날 분회회장 임정 전 기자들과 만나 “그래도 당은 안겨져야 하잖나”라며 “서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조율해야지”라고 말했다.

그는 분당 문제는 “그런거는 있을 수 없다”며 “깨지면 다 죽는다”고 강조했다.

비박계 이근현 의원은 “비대위 멤버를 균형 있게 구성하고 다시 비대위를 열어서 당을 정상적으로 굴러가게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원안 고수를 주장하고 있는 비박계 강경파들과는 입장을 달리했다. 이 의원은 “당이 망하고 내년에 정권을 못 잡으면 (친박, 비박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며 “정권을 잡기 위해서 뭉치고 단합해야지 내부가 풍기투 집안이 돼서 무슨 일을 하겠냐”라고 반문했다.

당 핵심관계자는 “이번 내분 사태를 주도한 친박계 일부 인사들이 정말 친박 수뇌부의 지령을 받고 움직인건지 정확하게 불 필요가 있다”며 “마찬가지로 지금 떠드는 비박계 중에서도 특정한 특정세력의 득세를 위한 권력 다툼 성격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친박이든 비박이든 지금은 탈레반들을 막아야 당이 산다. 당내 대주주들이 탈레반은 일단 막고 보자는 신사협정을 맺지 않는 한 답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성주 기자

김성주 의원, “탄소법, 도민 염원 덕택”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탄소산업법안 발의 후 약 2년 동안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다. 우려곡절도 많았다. 그래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전북도민의 염원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탄소법 국회 통과의 소회를 밝혔다.



김성주 의원은 “전북은 명실공히 탄소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대한민국 탄소산업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탄소법 국회 통과로 만족하지 않고 미래 산업의 꽃으로 불리는 탄소산업이 전북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좋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신광영 기자

국민의당, 정부 신산업규제 개선 “환영”

국민의당이 19일 정부의 신산업 규제 개선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순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신산업 생태계 구축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사물인터넷·드론·자율주행차·위치정보·바이오 헬스 분야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순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이번 규제 개선조치를 통해 드론을 이용한 택배 서비스, 서울 시내를 주행하는 무인자동차 시험운행, 의약품 자판기 등 우리 사회에서 투자를 유발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새로운 서비스들이 적극적으로 출현하기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이번 규제 개선이 선연적이고 형식적인 수준을 넘어 우리 기업과 경제주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또 이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정부의 감시기능과 기업의 사후적 책임을 강화하는 형태의 보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성주 기자

심상정 “백남기 물대포사건 국회청문회를”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19일 “정의당은 20대 국회가 열리는 대로 백남기 농민 물대포 사건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즉각 실시할 것을 3당에 공식적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상무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백남기 농민 물대포 사건에 대한 청문회 개최 또한 불의와 폭력에 맞선 국민민주주의 운동을 실천적으로 계승하는 일”이라며 “두 아들이 지역 표심만을 쫓을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5월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청문회 개최 성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주 기자